

	보 도 자 료 제공일 : 2026년 9월 18일 불 임 : 사진 2매, 건의문 1부	작성과	고흥군의회의회사무과
		담당부서	과 장 : 김성자 팀 장 : 김도형 담당자 : 조보경
		연락처	061)830-6095

고흥군의회, 소록도 관리권 고흥군 이전 촉구

- 의료·요양은 국가가, 일반행정·생활관리는 고흥군이 맡는 합리적 관리체계 요구

고흥군의회(의장 김민열)는 9월 18일 열린 제34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록도 관리권 고흥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소록도의 일반행정 및 생활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소록도 전역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소록도병원이 관할 하면서 한센인에 대한 의료·요양뿐만 아니라 섬 전체의 일반행정과 생활기반 시설까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소록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한센인 인권침해의 역사와 아픔이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인권 공간인 동시에 현재도 주민들이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고흥군의 생활공간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록도병원이 섬 전반의 행정과 시설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어 병원이 담당해야 할 의료·요양·재활 기능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일반행정·생활관리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생활 민원과 복지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렵다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대표발의한 조영길 의원은 “소록도 관리권 이전의 핵심은 국가의 책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데 있다”며 “한센인에 대한 의료·요양과 인권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일반행정과 생활관리는 고흥군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체계 개편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건의사항의 반영 여부와 소록도 관리체계 개편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조영길 의원 ‘소록도 관리권 고흥군 이전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 ‘소록도 관리권 고흥군 이전 촉구 건의’ 단체 사진
(김재열, 한승욱, 김지연, 류동철, 조영길, 김민열, 김인자, 박규대, 김준곤, 박경석, 김학태, 송종화 의원)

소록도 관리권 고흥군 이전 촉구 건의문

소록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한센인 인권침해의 역사와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며, 한센인들의 삶과 희생, 그리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기억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인권 공간입니다.

동시에 소록도는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상하수도·생활복지·민원행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고흥군의 생활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록도는 국립소록도병원이 섬 전체의 행정과 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국립소록도병원이 담당해야 할 의료·요양·재활 및 한센인 지원 기능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일반 행정·생활 관리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록도 주민들은 생활민원과 복지, 기반시설 이용에 있어 일반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25일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하여 한센인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노후시설, 인권·복지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살폈습니다. 이후 국립소록도병원의 의료·요양 기능은 국가가 계속 담당하되, 일반행정 및 생활 관리 기능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관계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문금주 국회의원 또한 소록도 관리권 문제를 고흥군민의 오랜 숙원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소록도 관리체계 개편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소록도 관리권 이전은 관리 책임의 지방화가 아니라 책임 있는 기능 분담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국가가 계속 책임져야 할 기능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한센인에 대한 의료·요양·재활 및 인권보호 등 소록도병원의 본래 기능을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한편, 소록도가 지닌 역사·인권 보호와 한센인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반면 고흥군은 주민등록·복지·민원 등 일반행정서비스와 도로·교통·상하수도·환경 등 생활기반시설 관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반행정 및 생활 관리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록도의 의료·요양·인권보호 기능은 국가가 책임지고, 주민 생활과 일반행정은 고흥군이 담당하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립소록도병원에 집중된 일반행정 및 생활 관리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와 고흥군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는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소록도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최종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소록도를 상업적 관광개발이 아닌 역사·인권·치유의 공간으로 보존하라!

하나. 국립소록도병원의 의료 기능은 국가가 계속 책임지되, 소록도의 일반
행정·생활 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전하라!

2026. 9. 18.

고 흥 군 의 회